

## 올해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완료

- 올해 500척에 222억 추가지원... 현재까지 정리대상 1816척중 1615척 정리 -

해양수산부는 2004년 12월 제정된 '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'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올해 총 222억을 투입, 500여척을 추가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.

척당 지원규모는 총톤수 5톤 기준(FRP어선, 선령 5년)으로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약 4천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. 2005년에 신청한 2,025척 중 89.6%인 1,815척에 대하여 528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리할 예정이다.

시·도별 지원금 지급액을 보면 전남이 236억6천800만원(833척)으로 전체의 44.8%를 차지했으며

- ▲ 경남 171억4천700만원(467척)
- ▲ 전북 60억6천500만원(156척)
- ▲ 부산 49억3천만원(135척)
- ▲ 충남 9억8천800만원(24척)으로 나타났다.

그 동안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지속적인 추진활동과 2004년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근절 등 어업질서확립을 추진한 결과, 2005년 어업생산량이 2004년에 비해 7.7% 증가한 271만4,000톤으로 이중 어선어업의 어류생산량은 72만2,000톤으로 전년에 비해 7.4% 증가하는 등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왔었던 어업생산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실제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성행했던 전남 여수지역의 경우,

낙지나 문어 등을 잡는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2004년 760톤에서 지난해에는 1,226톤으로 40% 증가했다. 낚시로 고기를 잡는 연안연승어업도 2004년 2,137톤에서 지난해에는 2,291톤으로 6% 증가했다.

또 부산, 경남 일부지역에서는 정치망이나 자망어업에 잡히지 않던 아귀가 최근 들어 다량 어획되고 있다.

특히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“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다”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다.